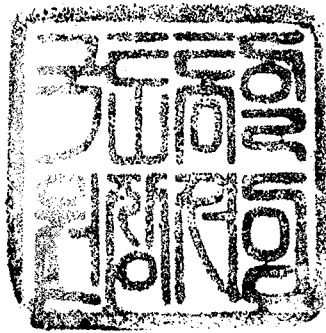


북한의 『남북연석회의』제의 관련

# 해 설 자 료

1988. 2.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below the seal.

Handwritten note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ncluding:

- 1988. 2. 25
- 남북연석회의
- 제안서
- 1988. 2. 25

## 목 차

1. 「남북연석회의」 제의 내용 ..... 3
2. 「남북연석회의」의 성격 ..... 6
3. 저 의 ..... 15
4. 우리의 대응조치 및 기본입장 ..... 17

## 1. 「남북연석회의」 제의 내용

- 북한은 1988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모, 긴장상태 완화는 남북 대화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입장을 진실하게 보인다면 우리측과 『인민들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한』 아무때나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쌍방 당국자들을 포함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 소집을 제의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월 13일 그들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란 것을 개최하여 이른바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연석회의」 소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예비회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대남편지를 채택하였는 바 동 편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편 지 요 지〉

- 쌍방 당국자를 포함하여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올해안으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 다국적 군축회담문제, 제24차올림픽 공동주최문제, 상호비방·중상 중지문제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임.
- 「남북연석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동 회의 소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2.19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예비회의」대표단은 쌍방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의 위임을 받은 5~7명의 대표로 구성하되, 쌍방당국 대표는 부장급(장관급)으로 하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는 부책임자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이어 북한은 1월 14일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위원장 허담 명의로 그들이 임의로 선정한 우리측 인사 50명에게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편지를 판문점을 통해 보내왔음.

(※ 허담 직책 : 정무원 부총리, 노동당 대남사업 담당비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편지수신대상자〉

당	국	국무총리	1명
정	당	민정당 등 8개 정당 총재	8명
종교·사회단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대표,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회 의장, 한국정치범동지회 회장,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 등	35명
개	별	인	사
		김수환, 백기완, 함석헌 등	6명
	계		50명

## 2. 「남북연석회의」의 성격

「남북연석회의」는 종래부터 주장해온 남북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등 명칭만을 바꾼 유사한 제의임.

-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연석회의」란 북한정권 수립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목적에 따라 「남북정치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으로 그 용어상의 표현만을 바꾸었을뿐 본질적으로 군중집회식의 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임.
- 그동안 북한이 이같은 군중집회식 회의를 남북간에 갖자고 제의한 주요사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음.
  - 1948년 3월 25일 북한은 「유엔」 결의에 따라 그해 5월 남한지역에서 실시되는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 14일 평양에서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

- 1950년 6월 7일에는 그들의 「6·25남침」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수단으로 이른바 남한측의 이승만, 김성수, 조병옥 등 「민족반역자」와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을 제외하는 조건 아래 1950년 8월 15일~17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소집할 것을 주장
- 1960년 4월 21일 북한은 4·19학생의거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혼란을 겨냥하여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
- 1970년대는 남북조절위원회가 그들의 의도대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조절위에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참가시켜 조절위를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연석회의를 개최(73.3.15 조절위 2차 본회의) 할 것과 김일성의 「5대통일강령」 발표(73.6.23)를 통해 이른바 민주화와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하에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및 노동자·농민·지식인 등 각계 대표들로 「대민족회의」 구성을 제의
- 1980년대초 제5공화국 출범이후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81.6),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82.1), 「20개 시범

실천사업」제의(82.2) 등 우리측의 일련의 대화제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른바 「민족통일촉진대회」(81.8), 「남북정치인 연합회의」(82.2) 소집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1983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할 당면4개항 의제를 제시하자 이의 반응으로 같은 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개최를 제의

「남북연석회의」와 같은 군중집회식 회의로는 남북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북한의 「남북연석회의」란 당국과 제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개별 인사 등 다중이 참가하는 일종의 군중집회식 회의로서 북한은 1970년대 당시 「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 소집제외시 동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자 범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바 있음.

— 남북조절위 3차 부위원장회의(74. 1. 30)시 『정당·사회단체란 남북 조선에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60~70개의 정



당·사회단체』라 규정하고 각 정당·사회단체에서 5~20명의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민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의하였음.

(\* 이같은 제안내용에 따르면 남북 각계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350~700명 정도이며 각계 각층 인민대표를 합치면 1,500명 이상이 되고 쌍방 회의대표 참가자는 무려 3,000명이 넘는 군중집회가 될 것임)

○ 1980년대 「남북정치인 연합회의」 제의(82. 2.10)에서도 회의 참가 대표를 남북한 각기 50명 도합 100명으로 구성하여, 거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다무적 원탁회담」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당국간 쌍무회담을 부정하였음.

○ 그간 남북대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남북 당국간의 쌍무적 회담에서 수세에 처하게 될 경우에 이같은 방식의 회의를 역제 의함으로써 진행 중의 회담을 교착시켰음.

— 북한은 「반공정책포기」, 「주한미군철수」, 「군사훈련중지」 등의 이른바 전제조건을 내세워 당국회담을 중단시키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 과거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중단할 시에는 반공법규및 반공기구 철폐, 공산주의 활동 등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 이른바 조건·환경론을 내세웠으며, 남북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80. 2~8)시에는 우리측 총리자격 시비와 이른바「군사파쇼통치철폐」를 주장함으로써 회담을 중단시켰음.

— 이에 추가하여 「남북간 초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남북한에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대표들의 「다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 내지 교착시켰음.

○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개별인사들 다수가 참가하는 군중 집회식의 연석회의에서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다국적군축회담, 제24차 올림픽 공동주최, 상호 비방·중상 중지문제 등을 토의 의제로 제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책임과 권능이 있는 쌍방 당국간에 직접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방법일 것임.

- 더우기 연석회의 석상에서 이상의 현안문제들을 설령 협의할 경우라도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쌍방의 설전과 정치선전 무대장으로 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간의 불신과 대립을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큼.

「남북연석회의」는 연공통일전선 책략임.

- 북한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내세우고 있는 「제정당·사회단체」란 북한사회에서 마치 정견과 이해를 달리하는 정당·사회단체로 존재하고 그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김일성 일당독재 체제하에서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한 「노동당의 어용 외곽단체」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연석회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음.

— 북한은 각종 대남제의, 성명, 호소문, 편지 등 대남 선전·선동 전개시 이들 정당·사회단체를 매개체로 앞세우고 있으며

- 동 정당·사회단체들은 남한사회의 불순세력 및 사회단체들과 정치적 협작을 기도하는 이른바 통일전선책략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 북한은 일례로 1982년 2월 10일 「남북정치인 연합회의」 제의에서 우리측의 대표 50명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이들과 회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당시 그 명단 중에는 일부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물론 북한의 대남흑색선전 단체인 「통일혁명당」인사를 대표로 포함시키는 등 누가 보아도 「연공통일전선」의 술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낸 바도 있음.

※ 북한의 대화기구 대표자격제한 주요사례

대 표 자 격	대 화 기 구	비 고
특정 정당· 사회단체 인 사 배제	전조선정치회의 (48. 4. 30) 남북정당·사회 단체 대표자 협의회 (50. 6. 7)	○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반 대하는 정당 및 인사만 참가 ○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와 주요 우익 보수정당 인사 참여 배 제

		<p>*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의 인사 및 이승만, 이범석, 김성수, 신성모 등 민족진영 인사 배제</p>
<p>특정정당·단체 인사만 참가</p>	<p>대민족회의 (73. 6.23)</p>	<p>○ 남북 정당·사회단체 개별적 인사 참가</p> <p>*공산주의적 계급 분류에 의한 정당·사회단체의 인사 참가 주장(근로자, 농민, 소자산계급)</p>
<p>당국 배제</p>	<p>민족통일촉진대회 (81. 8.6)</p>	<p>○ 남북의 정당·단체대표와 해외동포 참가</p> <p>*군중집회방식 회의로서 특정인사·특정정당 배제</p>
<p>당국 및 현존 정당·사회단체 인사 배제</p>	<p>남북 정치인 연합회의 (82. 2.10)</p>	<p>○ 북측이 일방적으로 남측대표 50명을 선정 발표</p> <p>*반한 친북교포, 범법구속자, 유령단체인사 포함</p>

- 이같은 북한의 과거 선례로 미루어보아 금번 「연석회의」제의는 다원적인 우리사회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공산적화혁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연공통일전선 구축을 획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 3. 저 의

○ 이상과 같은 「남북연석회의」 성격 규명에 비추어 볼 때 금번 북한의 「남북연석회의」 제의와, 동 제의와 관련한 대남편지 공세를 전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저의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북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적 정부이양과 총선거실시 등 정국 과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통일대화 논의를 유발·조장함으로써 국론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조성을 하겠다는 점.

— 시기적으로 88서울올림픽 참가 신청마감일(88. 1. 17)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와 「올림픽 공동주최」등을 의제로 하는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함으로써 그들의 올림픽 불참발표(88. 1. 12)와 때를 같이하여 한반도 긴장고조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그들의 올림픽 불참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점.

— KAL기 폭파사건 전모발표(88. 1. 15)를 앞두고 대남편지 공세 등 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민행에 대한 국제적 규탄과 비난을 모면, 희석시켜 보려는 점.

-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이 상존하며 그 긴장고조의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정치 전환기를 맞고있는 한국과 미국내의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불러일으켜 보려는 점 등임.
-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북연석회의」 제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대화·협상제의가 아닌 것임.



#### 4. 우리의 대응조치 및 기본입장

##### 가. 정부대변인의 대북성명

- 정부당국은 1월 15일 정부대변인의 KAL기 폭파사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연석회의」 제의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에 대해 공개 사죄,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선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한 바 있음.

##### 〈성명요지〉

- 대한항공 858여객기를 공중폭파,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킨 북한의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격심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음.
- 더우기 북한당국은 14일 이른바 다국적 군축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나섰으나 그와 같은 위장된 대화 제의로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살인행위가 결코 호도될 수는 없는 것임.

○ 북한이 진실로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민족적 양심으로 되돌아와 이번 사건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사죄하는 한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화 분위기의 조성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해 둬.

나. 향후 남북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

북한은 반민족적인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먼저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북한이 진실로 남북한간의 제 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자세에서부터 진지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동족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그들의 테러행위를 위장하려는 기만전술로서 누가 보아도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제의는 KAL기 폭파만행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규탄이 집중될 것을 우려, 세인의 관심을 남북대화로 돌려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북한은 83년에도 「버마암살폭발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3자회담」을 제의하는 위장 평화공세를 취한 적이 있음.

\* 북한은 84. 1.11 남북한 간에는 불가침선언문제, 미·북한 간에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토의하자는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한바 있음.

○ 북한은 KAL기 폭파만행에 대한 공개사죄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향후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함으로써 조속히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 남북한간의 문제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현안문제 해결은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서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금번 북한이 제의한 「남북연석회의」는 해방이후 북한이 줄곧 제의해오던 일종의 군중집회 성격의 회의체로서 의제토의 자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 해방후 김 구, 김규식이 참석했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군중집회식 회의」는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정치선전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한이 이번 「남북연석회의」의제로 제시한 「탐스피리트」 혼련 중지문제, 군축문제, 올림픽 공동개최문제 등은 그 성격상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간의 직접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단된 기존대화부터 재개해야함.

-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불신과 대결의식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의 바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남북간의 실질적인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만을 늘리는 제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대화통로인 남북 적십자·경제·국회회담 등 중단된 기존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야 할 것임.